

### 0.6%대 재해율 달성 '빨간불'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올 초에 목표로 한 0.6%대의 재해율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0년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자수는 총 48,066명, 이로 인한 재해율은 0.33%로 각각 기록됐다. 전년동기 대비로 볼 때 재해자수는 6.3%(2,861명), 재해율은 0.01%p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전체 사망자수는 1,028명, 전체 사망만인율은 0.7로, 각각 전년동기(1,059명, 0.76p) 대비로 2.9%, 7.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성 재해자수는 총 43,969명으로 전년동기(41,311명) 대비로 6.43%(2,658명)가 증가했고, 사고성 사망자수는 총 590명으로 지난해(662명)에 비해 1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재해자수는 4,097명, 업무상질병사망자는 43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21%, 10.3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산업재해자의 경우 제조업(16,834명), 5~49인 사업장(22,915명), 50세~54세 근로자(7,557명)에서의 재해와 전도사고(11,272명)의 발생빈도가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대비로 볼 때는 기타의 사업, 5~49인 사업장, 60세 이상 근로자, 전도재해 등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임업, 300~999인 사업장, 25세~29세 근로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사고성 사망자의 경우 건설업(232명), 5~49인 사업장(238명), 60세 이상 근로자(123명)에서의 재해와 추락사고(198명)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제조업, 50~99인 사업장, 40세~44세 근로자, 협착 등의 재해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건설업, 5인 미만 사업장, 50세~54세 근로자, 교통사고 등의 재해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제조업(1,634명), 5~49인 사업장(1,650명), 60세 이상 근로자(625명), 요통질병(2,143명) 등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대비로는 제조업, 1,000인 이상 사업장, 55세~59세 근로자, 신체부담작업 등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전기가스수도업, 5인 미만 사업장, 25세~29세 근로자, 요통 등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소홀 사업장 명단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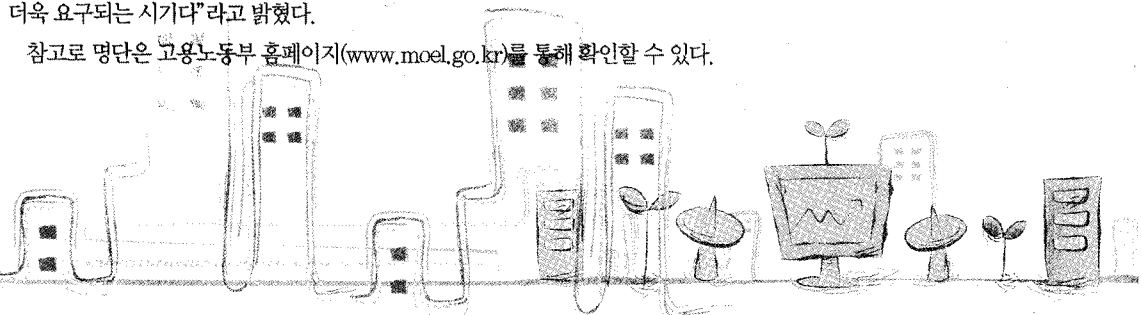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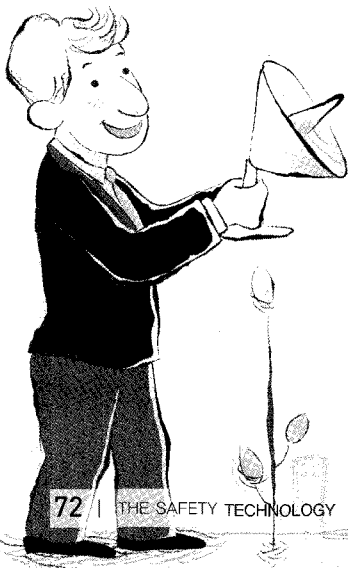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산업사고 등이 발생한 '산업재해 예방 소홀 사업장' 명단을 8월 3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2009년도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재해자 2명 이하 제외) 295개소 △2009년도에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41개소 △2007~2009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개소 △2009년 중대산업사고 1건 이상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2개소 등 총 339개소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산업재해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사실을 공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운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트렌드는 기업 이미지와 기업의 성패가 함께 가고 있는데, 기업 이미지 형성의 최소 필요조건은 바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지금 이 시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초안전교육 소요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앞으로는 건설사가 건설현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8월 9일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부분에 더해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부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출장을 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출장비도 항목에 추가시켰다.

## 최근 5년간 산림조합의 안전사고 2,365건 발생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가 2,3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이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는 2005년 315건, 2006년 405건, 2007년 452건, 2008년 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714건이나 발생하여 5년 사이에 무려 227%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사고도 자원조성분야에서 18건, 산림토목 분야에서 8건으로 총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산림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작업장이 대부분 열악한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고, 작업인부들도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전경련, 산재율 산정방식 문제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현재의 산재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경련은 산업현장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0년 최우선 규제개혁과제 30선'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재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가락을 뼈거나 발목을 접질리는 등 경미한 사유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산재해로 간주하여 사업장의 산재발생 건수와 산재율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현장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상처로 병원을 방문하면 통상 1~2주의 진단이 나오는데, 이를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재해로 건수로 간주하여 산재율을 책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산재율 산정 시 업무 연관성 및 사고 경중,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산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대형유류탱크의 안전성능검사에 대한 중복규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대형유류탱크의 경우 민간업체에 의한 사전점검,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등을 모두 받아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산업기술원의 정기검사를 서류 검사로 대체하거나, 민간업체에 의한 사전점검 시 소방기술원 관계자가 입회한 후에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 또는 민간업체로부터의 사전점검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거나 준수가능성이 낮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경영여건이 향상되어 우리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 중장비에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해야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건설 중장비에 앞으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36만대로 전체 자동차 대수의 2% 수준이지만 이들이 뿜어내는 오염물질은 전체의 20%로 일반 자동차의 11배를 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지역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방안을 시범 추진한다. 이는 엔진정비보다 저감장치 부착이 효과가 크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우선적으로 주행이 잦은 덤프 트럭과 레미콘 100여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시범 장착이 시행되는 100대에 대해 9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후 확대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